

#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86
----------	------

발의년월일 : 2022. 04. 01.

발의의원 : 김태원 · 김규학  
박갑상 · 배지숙  
송영헌 · 윤기배  
윤영애 · 이태손  
정천락 · 홍인표  
황순자 의원(11인)

## 1. 제안이유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및 절차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에 관한 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스토킹범죄 등의 용어 정리 (안 제2조)
- 나. 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 (안 제4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규정 (안 제6조)
- 마.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규정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